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완료…선출 프로세스 시작

10월 4일 구성원 단체별 총추위 위원 35명 구성 완료

직원·학생 간 투표비율 5:5(?) 4:6(?) 아직 미궁

총동문회 “동문 몫 총추위 위원 왜 총장 직무대행이 임명하나”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제 16대 총장을 본격적으로 뽑기 위한 이른바 ‘총장 선출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 첫 단추인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이 지난 4일 완료됐다. 총추위 위원은 구성원 단체별로 각각 교수 15인, 직원 5인, 학생 5인, 동문 5인, 법인 5인으로 구성됐다. 대학본부는 총추위 구성과 함께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 상태다.

교수의회는 서울·의학·국제지회 각 5인씩 총추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체 대의원 회의와 각 지회별 대의원 회의에 총추위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하여 토론 후 투표에 부쳐 최종 결정한 결과다. 직원 층은 임원진 중 제 1노조 3인, 제 2노조 1인, 의료원 노조 1인 씩을 총추위 위원으로 선정했다. 학생 총추위 위원은 서울캠퍼스(서울캠) 종학생회(총학) 2인, 국제캠퍼스(국제캠) 종학 2인, 국제캠 일반대학원 학생 1인으로 구성됐다. 서울캠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학생회장을 포함한 1인으로 총추위 구성은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인 또한 지난 4일 내부 회의를 거쳐 5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추위 동문 위원은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의 추천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구성원 단체별 총추위 위원 구성은 완료된 상태지만 공식적인 위촉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기존 마감일인 4일보다 조금 미뤄진 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추위는 지난 2일 대학본부가 발표

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에 최종 3인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까지 존속된다. 총추위는 예비후보 자격 요건을 검토해 예비후보군을 확정, 오는 24일에는 구성원 단체에 최종 후보 3인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다. 총추위의 예비 후보자 자격 검토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총추위가 각 구성원 단체별로 선정한 후보자 3인(교수 단체 추천자 2인, 학생·직원 단체 추천자 1인)을 30일까지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 사회가 그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총추위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활용해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예비 후보 정보를 제공하고 총장후보위원회를 주관하는 등의 일을 겸한다.

총추위 구성은 차질 없이 완료됐지만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도 존재한다. 발표된 지침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불안감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침에는 최종 후보 3인을 추천하기 위한 구성원 투표 방식이나 지원자가 3인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수와 학생·직원이 같은 후보를 추천할 경우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후보 추천 행정지원단(지원단) 층은 “세부 문제는 구성된 총추위가 지침 내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총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행정 업무와 총추위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 내 기구이며 지난달 30일에 출범했다. 본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후보 추천 일정〉

총장후보 추천 행정지원단 구성	9월 17일 (화) ~ 9월 23일 (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9월 23일 (월) ~ 10월 4일 (금)
후보자 공모	9월 25일 (수) ~ 10월 8일 (화)
후보자 추천	10월 7일 (월) ~ 10월 9일 (수)
후보자 자격 검토	10월 7일 (월) ~ 10월 18일 (금)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주관 총장후보토론회	10월 21일 (월) ~ 10월 23일 (수)
구성원 단체별 추천후보 3인 (교수 2인/학생·직원 1인) 선정	10월 24일 (목) ~ 10월 28일 (월)
최종 후보 추천(이사회 보고)	10월 29일 (화) ~ 10월 30일 (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명단〉

교수		
서울지회	국제지회	의학지회
강재식 의장	이창수 의장	김우식 의장
정창현 사무총장	이찬희 사무차장	조세형 사무차장
송상호 총장선출특위위원장	정하용 교무위원장	주성숙 대의원
김봉석 교무위원장	홍희기 대의원	이종수 교수
하상수 대의원	김용호 교수	이지아 교수

직원	학생
한상 제 1노조 위원장	김수혁 서울캠퍸스 총학생회장
임경열 제 1노조 수석부회장	박윤찬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민석 제 1노조 사무국장	전완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박경규 민주노총 경희학원 지부장	이지은 국제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손기경 민주노총 경희의료원 지부장	박삼일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학생

* 법인 위원 5인과 동문 위원 5인은 선발됐지만 공개되지 않음.

격적인 업무는 총추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되며 총장 선출에 관한 행정 업무가 모두 지원단으로 이관된 상태이다.

총장선출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는 직원과 학생 간 투표반영 비율 합의가 필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원과 학생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애초 직원은 5:5의 투표반영 비율을 제안 했으나 학생은 직원에 비해 학생 수가

현저히 많다는 것을 이유로 6:4를 요구 했다. 이에 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 측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제 1노조 한상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2안을 타결한 이유는 1안에서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2안에서도 학생과 직원 간 투표반영 비율 합의가 자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도 “투표반영 비율을 제외한 것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던 1안과 달리 2안은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총장 선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캠 총학 김 회장은 “직원과 학생은 수직으로 약 10배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5:5의 비율로 양측이 직선제를 시행한다면 직원과 학생의 1표는 다른 무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그런 이유로 학생은 6:4의 투표비율을 제시한 것이고 간선제 투표방식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의 투표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며 한 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총동문회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구성원의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제3차 이사회 결의 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현재 총동문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3차 이사회 의결을 비롯한 총장선출 관련 계획, 규정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총장선출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추위 동문 위원을 직무대행이 선정하는 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총동문회도 무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단에 따르면 10월 4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서류를 갖춰 지원한 후보는 1인이며 총장 후보 공모 마감은 오는 8일이다. 총추위에 의한 후보자 추천은 오는 7일부터 3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실시 예정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대상에는 우리학교도 포함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조국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논란 등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자 교육부가 입시문제 개선을 위해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및 특목 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 조사 대상 대학에는 우리학교를 비롯해 건국대, 광운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흥의대가 포함됐다. 우리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 기준 총 모집 인원이 5,424명으로 실태조사 대상 대학 중 최고로 많다. 지난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신입생 선발 인원 또한 2,685명으로 실태조사 대상 대학 13개교 중 최대 규모를 보였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해 10월 말까지 입시자료를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실태 조사



경희대·외대·시립대 세 학교가 꽃피운
(삼동제 TROIKA)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동대문구 세 학교의 교류 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삼동제 TROIKA)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연, 학술,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가 이뤄졌다. 사진은 우리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치른 체육 분야 테니스 경기이다.

(사진 = 고황 제공,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여열 ‘집중열람실’로 개편…논란 일단락

〈여학생열람실〉

오진영 기자 clara0504@knu.ac.kr

[서울] 오는 28일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여학생 열람실이 폐지된다. 여학생 열람실이 없어진 공간에는 성별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집 중 열람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학생 열람실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학가에서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면서 서울캠 중앙도서관에 위치했던 여학생 휴게실이 여학생 열람실로 교체됐다.

이렇게 생긴 여학생 열람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성 문제와 역차별 논쟁이 끊이지 않는 학내 논란거리가 되었다. 안주환(문화관광콘텐츠학 2018) 씨는 “도서관은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여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좋은 열람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도서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해 남성 가해자 비율이 높다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여학생 열람실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명을 요구한 여학생 A씨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대상은 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학생 열람실은 성범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던 여학생 열람실 존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캠 종 학생회(총학)는 지난 4월 5일부터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여학생 열람실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여학생 열람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여학생 열람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비율은 남학생이 5%, 여학생이 60% 가량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가 진행되던 중 한 익명의



제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해당 진정서에는 “여학생 전용 열람실은 있지만 남학생 전용 열람실은 없다”, “여학생 열람실 바로 앞에 남자화장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총학, 중앙도서관, 도서관자치위원회(도자위)는 회의를 열어 여학생 열람실 문제를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여학생 열람실에 대한 논란도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진정서에 대한 답변으로 여학생 열람실 폐지 혹은 남학생 열람실 신설을 권고하면서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뒀다. 총학, 중앙도서관, 도자위 측 역시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일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난달 2일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여학생 열람실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남학생 열람실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당장 도서관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학생 열람실 폐지와 관련해 박예슬(외식경영학 2018) 씨는 “여학생 열람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점점 남학생 역차별로 이어지다보니 논란이 발생했던 것 같다”며 “여학생 열람실의 존재로 역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여학생 열람실의 당초 취지와 같이 여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측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학, 중앙도서관, 도자위 측은 여학생 열람실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총학 측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 중앙도서관에 위치한 모든 열람실에 CCTV를 설치하고 캡스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중앙도서관과 협의를 통해 CCTV의 설치 분량과 위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안전과 관련한 학생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삼동제〈TROIKA〉폐막

“일회성 아닌 공식 행사로 자리잡길”

오진영 기자 clara0504@knu.ac.kr

[서울] 제1회〈삼동제 TROIKA〉(삼동제)가 막을 내렸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삼동제에서는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3개 대학의 공연, 학술 그리고 체육 세 분야의 교류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잔디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각 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총학, 총장, 동대문구청장 및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연분야 ‘악동(樂動)제’는 우리학교에서 지난달 20일에 열린 밴드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후 댄스 플래시몹, 스트릿댄스 연합 무대, 클래식 플래시몹 등이 각 학교와 청량리 역사 등에서 진행되었다.

학술분야 ‘감동(感動)제’는 지난 달 25일부터 사흘 간 ‘추경, 시선’이라는 작품 전시회가 세 학교에서 하루씩 진행됐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Campus Melody Camp’라는 문화제를 개최해 문학의 밤과 복합 영상제 등을 진행했다.

체육분야 ‘역동(逆動)제’는 남녀 축구, 농구, 테니스, 피구, e-sports 5개의 종목으로 구성됐다. 체전 특성상 여러 번의 예선을 거쳐야하기에 지난달 9일 출정식이 먼저 진행된 후

지난 27일까지 경기가 이루어졌다. 전 종목에서 결승 진출에 성공한 서울시립대학교가 종합 점수 80점을 차지해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폐막식은 우리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여러 동아리와 응원단 그리고 초대가수가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안현정 씨는 “지난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농담처럼 세 학교 간의 교류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현실화 돼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흥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선준(행정학 2016) 씨는 “교류전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된다면 알고 있었지만 축제 진행 중 많은 부분이 일반 학생들에게 까지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동아리연합회 유세인 회장(국어국문학 2016)은 “지난해 댄스동아리 간 연합 진행 후 이를 좀 더 넓혀 학교 간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보고자 삼동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씨는 “소통의 어려움과 학교 간 행정 차이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 흥보 방면이나 진행이 특정 분야로 치중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공식적인 하나의 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진행된 클래식 플래시몹(이스턴 하모니)

2019학년도 2학기 본전공(제1전공) 선택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본전공(제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10. 4.(금) ~ 10. 11.(금)

신청대상

- 학부(과) 단위 입학생 중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 1) 해당학부·영어학부·법학부·사회과학부·언론정보학부·언론정보학과(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호텔관광대학 소속 학부·생활학부
 - 2) 예외학부·전공배경제와 전공 확장제를 실시하는 학부·자율전공학과·미술학부·무용학부

신청방법

-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 신청 → 포기대상 전공 펼치기 → 전공포기 클릭 → 포기신청 클릭
- 신청한 본전공(제1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
- 본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전공(제1전공)에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 매 학기 본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
- 본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19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포기기간 : 2019. 10. 4.(금) ~ 10. 11.(금)

다전공 신청 안내

- 가. 신청대상 :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총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2학기 이상 등록을 밟았고 재학 중인 자
 - 2)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신청한으로 이수신청을 승인함
 - 3)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은 자체 등록하게 신청함
 - 4)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지원팀 안내문 참조
 - 5)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호텔관광대학 학생의 동일학부 내 다전공 신청에 관한 사항은 호텔관광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나. 다전공 선발 인원(첨부 선발 정원 참조)

1) 2019학년도(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경영학과는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2) 연간 선발인원으로 하기 선발 후 전여인원을 2학기에 선발함

3)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다. 다전공 선발 기준 :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영학전공 : 전학년 평점평균 3.3 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세무학전공 : 전학년 평점평균 3.0 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라. 다전공 선발 학과(첨부 선발 정원 및 다전공 이수불가 전공 참조)

1) 다전공 이수는 문과대학·정경대학·경영대학·호텔관광대학·미과대학·생활과학대학·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함.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중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제외함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다전공 신청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 신청 → 하단 다전공신청 → 다전공 검색 후 선택 → 지원서류 작성 → 신청 클릭

* 학부편제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1전공 신청 후 제2전공 신청 을 진행해야 함

2) 신청한 본전공 및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2개 트랙까지 신청가능)

3) 전공 신청정보에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4) 다전공 신청은 학생의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출입 시에는 ‘경희대학교 학칙’ 경과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포기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 신청 → 포기대상 전공 펼치기 → 트랙신청 클릭 → 트랙학

인 후 신청 클릭

* 유의사항

1) 전공 승인신청 시 함께 신청한 트랙선택은 전공 승인 불가 함께 취소됨

2) 단과대학별로 트랙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3) 한 전공당 트랙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4) 본전공(제1전공) 신청은 학생의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출입 시에는 ‘경희대학교 학칙’ 경과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포기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 신청 → 전공 세부목록 펼치기 → 트랙포기 클릭 → 트랙포

기 사용자 작성 → 포기신청 클릭

유의사항

가. 승인된 전공 및 트랙과정은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해야 함

나. 매 학기 트랙선택 시 신청한 트랙교육과정을 변경 및 포기 가능함

다. 트랙교육과정 신청하였거나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출입요건 미충족으로 출입이 불가능함

라. 각 전공별 트랙과정의 세부 이수요건에 관해서는 학과별 교육과정 시행세칙 또는 불임 전공별 트랙교육과정

이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 트랙교육과정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19학년도 2학기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및 포기 안내

“전공트랙과정”이란 학과의 교육과정 안에 마련된 전문화된 전공교육체계로,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들로 일종의 계통도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학업 목표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에 대하여 전공트랙과정을 신청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단계를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10. 4.(금) ~ 10. 11.(금)

신청대상 :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또는 포기하는 재학생

대상전공

가. 전공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본전공(제1전공)

기획



‘팽창지향’ 부추기는 언론사 대학평가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언론사 대학평가의 평가방식과 기준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이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 속이다. 매년 발표되는 언론사 대학평가는 이미 한국사회의 익숙한 풍경이다. ‘어느 대학이 뛰어나고 어느 대학이 부족한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순위로 제시하는 언론사 대학평가는 대학에게 외면할 수 없는 유혹으로, 구성원들에게는 자부심의 문제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입시를 위한 기본고려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일보는 1994년 국내 언론사들 가운데 최초로 대학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2009년에는 조선일보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협력해 ‘아시아권 대학평가’를 시작했다. 2013년에는 동아일보 역시 후발 주자로 나서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세 개의 주요 신문사가 모두 대학평가를 시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여전히 가장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기사의 첫머리에서는 “학생·학부모에게 생생한 대학 정보를, 대학사회에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평가에서는 ‘교육여건’, ‘교수연구’, ‘학생 교육 및 성과’, ‘평판도’ 네 개 부문과 각 부문에 속하는 총 32개의 하위지표를 기준으로 사용해 부문별 순위와 종합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 이준호 계장은 “학교 차원에서 국내외의 대학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정책 운영의 중요한 지침들 가운데 하나로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평가기관에서 결과 발표와 함께 상세한 평가 데이터를 학교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표에 따라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협력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정책을 개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언론사 대학평가가 대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2017년에는 ‘서울소재대학교 교수회연합회(서교련)’가 언론사 대학평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교련은 언론사 대학평가가 대학을 학문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경쟁에 몰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에는 고려대 종학생회(총학)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 강화한다면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를 선언했고 당시 우리학교 종학 또한 이를 동참하기도 했다.

한림대 윤훈일(언론정보학) 교수는 『관훈저널』에 게재한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국내 언론사의 현행 대학평가를 비판한다. 윤 교수는 “연구논문 숫자나 연구비 수주액 등 연구의 양적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결과물이 기준 지식체계 확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지적 성장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무시 한다”면서 “양적인 지표 위주로 대학을 경영할 때 대학 본연의 교육적 사명이 실현되고 연구능력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교련 이사장이기도 한 이성근(관광대학원 부동산학) 교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결국 언론사가 대학을 평가하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교육여건(100)	교수연구(100)
△교수 확보율(13)	△교수당 교외연구비(15)
△등록금 대비 장학금(15)	△교수당 자체 연구비(10)
△강의 규모(5)	△국제논문당 피인용(20)
△등록금 대비 교육비(10)	△국제논문 게재(10)
△새입 대비 기부금(5)	△국내논문당 피인용(10)
△기숙사 수용률(8)	△국내논문 게재(5)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7)	△저역서 피인용(5)
△외부 경력 교원 비율(5)	△저역서 발간(5)
△외국인 교수 비율(5)	△교수당 기술이전수익(10)
△외국인 학생 비율(10)	△교수당 산학협력 수익(10)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7)	
△교환학생 비율(10)	
학생교육 및 성과(70)	
△순수 취업률(15)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10)
△유지 취업률(15)	△입학 추천 대학(10)
△중도 포기율(10)	△발전 가능성 있는 대학(6)
△졸업생 창업활동(10)	△국가지역사회 기여가 큰 대학(5)
△창업교육 참여율(10)	
△현장실습 참여율(10)	

“양적인 지표 위주로
대학을 경영할 때
대학 본연의 사명이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고 순위를 매기는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이다”라면서 “물론 언론인들이 대학 교육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대학 교육이라는 문제에 있어 비전문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학별로 사정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도 이와는 무관하게 획일화된 기준, 그것도 전문성과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지표들로 이뤄진 기준으로 대학을 줄 세우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학들은 언론사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 오히려 평가 결과에 행정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순위 6위를 차지했다. 1994년 첫 번째 평가에서 10위에 선정된 이후 역대 최고 순위였을 뿐만 아

육연구성과’ 부문에 포함해 발표하는 ‘졸업생 (대학원) 진학현황’이나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같은 지표들은 배제돼 있다.

유학생 관련 지표로는 ‘교육여건’ 부문 하의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지수’, ‘교환학생 비율’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이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학교가 더 ‘국제화’ 됐다거나 유학생 교육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유학생들의 학업에 있어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량화해 나타낼 수 있는 유학생의 언어능력 총족학생비율, 중도탈락율 등의 지표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2018년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소폭이긴 하지만 언어능력 총족학생비율은 줄고 중도탈락율은 늘었다.

학술진흥팀 이 계장은 “대학사회 내외에 언론사 대학평가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대학 당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올해는 어떤 대학평가에서 어느 대학이 몇 위를 했는지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끄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순위가 전년에 비해 떨어지면 학교 안팎으로 비난과 추궁이 쏟아지는데 그런 목소리들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큰 관심이 대학의 변화를 주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성근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량적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언론사가 내세우는 대학 간의 경쟁이라는 것도 제시된 지표에 따라 점수를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몰두하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평가에서 우리학교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양적 평가에 의존한 결과라면 그 상승이 정말 대학과 그 구성원들을 위해 건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학생은 언제까지 학교의 ‘소모품’이어야 하나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유학생 사회 내부에서 ‘유학생 지원 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학교가 작년에 이어 올해 전국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수 1위에 올랐고, 이에 힘입어 국제화 지표가 높아진 결과다.

지난 5년간 우리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우리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1,711명, 2016년 2,071명, 2017년 2,317명, 2018년 2,770명이었고 올해는 2,845명에 이른다. 2015년과 비교해봤을 때 5년 사이 66%가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연수과정(어학연수, 교환학생) 중인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4,727명에 달한다. 우리학교 재학생 26,430명의 1/6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증가폭을 끌어낸 배경엔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20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학생 장학 기금인 GKS 기금을 설치해, 현재 연 2,000억 원 규모의 유학생 대상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고등교육법〉 제 30조 7항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정원 외 인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을 선발하는데 법률적 제한이 없다.

우리학교도 이를 준용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학교 학칙 90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한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국제교류처 서경아 팀장은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체 재학생의 10% 이내로 선발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학과는 입학사정위원회와 각 단과대학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가이드라인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란 정량적 성과에만 매달린다는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도 존재했다. 니키(국제학 2018) 씨는 “한국의 대학평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총 인원 수가 주요 평가 항목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다른 대학과 인원 수 경쟁에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원제도의 허점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새 학기, 설렘과 막막함 사이) 대학주보 제1651호 5면, 2019.09.19. ▲주거 ▲의료 등 학교 밖의 생활 영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5년 간 우리학교의 유학생 수 꾸준히 증가… 1,711명(2015년) → 2,845명(2019년)

유학생 당사자 “학교는 단순히 정량적 성과에만 매달려 우리의 의견이 무시된다”

국제교류처 “현재 단계별로 유학생 문제 개선 중에 있지만 당장의 수요에는 못 맞춰”



학교 일대를 바라보면 많은 유학생을 위한 여러 언어의 제품광고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총 인원수가
대학 평가 주요항목이라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듣기보다
인원수 경쟁에 몰두해

”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장 첫 번째로 당면하는 과제는 바로 살 곳을 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양캠 모두 기숙사 인원 모집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서울캠은 세화원, 국제캠은 우정원에 자리 를 잡게 된다.

이때 양캠 유학생들에게는 ‘행복기숙사’나 ‘제 2기숙사’ 같은 신식 기숙사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캠 국제교류처 산하 학생단체 ‘IFCC’ 회장 이준석(언론정보학 2014) 씨는 “유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의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이 점 때문에 자취방을 구하려는 유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외국인지원팀은 “세화원 뿐만 아니라 캠퍼스 밖 유학생 전용 거주시설과 같은 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숙사 시설에 불만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은 학교 밖에서 살 곳을 찾게 된다. 국제캠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문제는 학교 밖의 상황에 학교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역할은 국제교류처 산하 학생단체의 몫이 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유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국제캠 국제교류처 산하 학생단체 ‘KHUddy’ 회장 김선봉(국제학 2018) 씨는 “유학생의 자취방을 알아보면서 학교에 문의했더니 나중에 방을 구하면 알려달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며 “물론 학교 밖의 시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학교가 체계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거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쓰이는 비용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유학생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학에게 여건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90일 미만의 비자(C3 유형)를 소지하고 있는 단기 연수생도 포함된다.

우리학교에서도 이를 일정 부분 준용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의무적으로 ‘외국인유학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학교와 보험업체의 연계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행된다.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에 나와 있는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면 된다. 서울캠 외국인지원팀은 “학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하는 유학생은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보험 서비스에 전 유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은 학교-보험업체 연계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2019년도 1학기부터 우리학교와 교환학생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라(국제학 2019) 씨는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활동할 때, 당시 학교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보험이 있었다”며 “한국에선 학교가 보험뿐만 아니라 교환학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캠 국제교류처 IFCC 회장 이씨는 “지난 학기에 보험이 없었던 교환학생이 골절상을 당했는데, 병원비가 600만 원이 나와서 IFCC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다”며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환학생에게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학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월성 제고 TF’가 구성된 바 있다. TF에는 국제교류처장, 외국인지원팀, 각 단과대학 행정실 관계자, 학생 대표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참여했다. (유학생 위한 TF 구성, 내실있는 국제화 위한 걸음 시작/대학주보 제1640호 3면, 2018.11.05.)

학교 측은 매년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선 TF만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교류처 서팀장은 “TF에서 외국인 학생 상담 프로그램 확대, 영어강의 인프라 개선과 같은 고무적인 내용이 많이 논의됐다”는 반면 “현재 단계별로 개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의 수요에는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e are completely lost.” 우리(유학생)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앞서 우리학교가 ‘유학생 인원 수 늘리기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니키 씨의 일갈이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모든 것을 쏟아내도 되는 시기는 지났다. 지금부터는 유학생 지원 제도에서의 협력성이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

기획

형식적인 신입생 건강검사, 불안한 학생 건강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신입생 건강검사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학생에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검사 결과의 활용 또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신입생 건강검사는 의무사항이다. 이번 학기에도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경희의료원에서 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예정된 상태다. 건강검사를 주관하는 입학처 측은 “신입생 건강검사는 학생들 간에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예방 및 수학에 적합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학교보건법에 의거 매년 시행돼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학처에서는 학기 초 학생들에게 해당 검사가 의무임을 문자 메시지와 학과별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고, 신입생들은 등록금과 함께 수검비(25,000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해당 검사가 의무사항인지 모르거나, 이미 수검비가 납부된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빛(경제학 2018)씨는 “다른 일정이 겹쳐 해당 검진을 받지 못했고,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별다른 홍보가 없어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며 홍보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7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학기 건강검사에 대한 정보 역시 학과별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되지 않았고 ‘KHU알리미’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 바가 없었다.

건강검사를 받은 이정민(의예 2019)씨 역시 “해당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납부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며 정확한 고지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한 “소속 학과마다 시간이 정해



져 있었는데 각 학과의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수검 시간을 계획하거나, 해당 시간이 아니어도 수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홍보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수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며 건강검사 실시 중에 느꼈던 아쉬움을 표현했다.

건강검사 항목 및 결과 활용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검사 항목은 신장·체중·혈압을 측정하는 체위 검사를 비롯해, 당뇨병·신장 질환 여부를 검사하는 요검사, 백혈구·적혈구·혈소판 수치를 측정하는 일반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A형 간염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로 이뤄져 있다. 오창모 교수(의학과 예방의학교실)는 “현행 검사에서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는 검진 항목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생들의 심리 상태 문제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심리 검사가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사 역시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검사 결과지의 ‘관련질환’란과 ‘소견 및 조치사항’란의 설명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 기능 검사에 대해서는 ‘증가시 : 간질환’, 혈압 검사 항목에서는 ‘고혈압 및 저혈압’으로만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안내만 제시되고 있다.

지난 학기 신입생 건강검사를 받은 안태욱(한의예 2019)씨는 “흉부방사선 검사에 대해서는 정상 혹은 비정상의 결과만 표시되는데, 어떤 질병에 대

한 판정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고,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표기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보라 보기 어려웠다”며 검사 결과지의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 역시 “검사 결과지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해 의료인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적어도 해당 항목에 이상을 느꼈을 때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는지 안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해 검사 결과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건강검사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2조는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검사 결과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학생 건강증진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손희완(무용학 2016) 씨는 “건강 검사를 받으면 혈압 수치가 저혈압 구간에 있음은 알 수 있었으나,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지침만 들었다”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고민하며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라 다소 형식적으로 구성된 검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졸업을 앞둔 지금 까지도 수업 외에 체육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웠는데, 학생들의 건강 검사 결과가 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반영되었다면 도움을 얻었을 것”이라며 학생 건강증진계획의 개선을 요구했다. 안태욱(한의예 2019) 씨도 “건강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안내된다면 같은 검사라도 더욱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며 건강검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학처는 당분간 빠른 개선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입학처 김현진 팀장은 “입학처 내엔 의료 관련 전문 인력이 없어 추가적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입생 건강검사를 제외한 학생들의 다른 건강 데이터는 타 부서로 모이고 있어 종합적인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전해 학내 건강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다만 “일부 단과대의 낮은 수검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미수검 학생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수검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마련해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학부생을 위한 대학원 학과 설명회 2019학년도 일반대학원 입학 FAIR 개최

2019학년도 일반대학원 입학 FAIR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입학 FAIR는 대학원 각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입학과 학과정보를 직접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대학원생들의 포스터 학술제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전공 계열의 학술 활동과 학문적 성과를 접하는 기회가 부여되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제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1. 참여대상: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생

캠퍸스	행사일시	행사장소
서울	2019년 10월 1일(화) 오전 10:00 ~ 오후 5:00	스페이스21 광장(한의과대학 앞)
국제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10:00~오후 5:00	도서관 로비

2. 행사일시 및 장소

3. 학과별 주요 상담내용

- 상담은 대학원 학과 교수님과의 1:1 상담 형태로 진행됩니다.
- 학과 특징, 학업과 연구 수행, 졸업 후 진로 등을 상담해 드립니다.
- 본교 학부생이 대학원 입학 시 제공되는 각종 장학제도를 상담해 드립니다.

4. 일반대학원생(서울캠퍼스)의 학술제

- 일반대학원 학술단체협의회의 고황스콜라 포스터 학술제, 경희영스콜라 포스터 발표가 진행됩니다.
- 대학원생들의 전공별 학문적 성과를 포스터 발표 및 PPT 발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학부생들이 현장 연구 발표를 접하고 직접 지지하는 연구에 스티커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시면 선착순으로 학교 기념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2019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보충훈련 공고

개요

가. 훈련대상: ‘19년 1학기 기본교육 훈련(8시간) 불참자, 2학기 복학생으로 ‘19년 기본훈련 불참자 전원
나. 훈련장소: 용인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동동 목동로 87 / 네비케이션: 바른고기 검색)
다. 훈련일자

훈련 일자	훈련 대상	시간
10월 29일(화)	◎ 국제대학 ◎ 공과대학 ◎ 외국어대학 ◎ 융통과학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 체육대학	
10월 30일(수)	◎ 생명과학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전자정보대학 ◎ 대학원일반/전문/특수 ◎ 교직원(교수)	09:00~18:00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장)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착용 시 입소 불가)
※ 전투복, 전투화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하고 참석한 경우만 현지 대야가 가능함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여권) 필히 지참할 것

교통안내

가. 학교 지원차량: 학교정문 출발(8:05분) /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 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령소에 도착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obigun.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 가능합니다. 대학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훈련 입소 시 시급주총장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 훈련 전 음주행위 자체로 입소불가입니다.

마.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
※ 예비군홈페이지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희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바. 무단불참으로 인한 고발 및 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개인 책임입니다.
※ 금번 보충훈련 불참자가 추후 보충훈련에는 차령자일 없이 개별적으로 입소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하고 금번 보충훈련 전원 참석 요망

사.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0 전기)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 1차: 2019.10.14(화) 10:00~21(화) 17:00 - 예비군교수단원 접수 불가	• 접수처 : www.uwayapply.com
	• 2차: 2019.10.22(화) 10:00~28(화) 17:00 - 예비군교수단원 접수, 터전군 접수 불가	
고사장 인내	2019. 11. 21(화) 15:00~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http://edu.khu.ac.kr)에 공지
필답	2019. 11. 23(목) 10:30~12:00	•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캠퍼스 : 음악교육 국제캠퍼스 : 재체육교육
면접	2019. 11. 23(목) 14:00	• 일반전형, 특별전형 지원자 전재 단, 미술교과전공은 10:00부터 실시
비고	• 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입실 • 시험장소 : 서울캠퍼스 정운관,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합격자 발표	2019. 12. 18(수) 15:00	• 세부시각은 신입생 모집요강 내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합격자 등록	2020. 01. 06(월) 10:00 ~ 09(목) 16:00	

서구중심주의 담론을 넘어

교수칼럼



고인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지배받는 지배자』(2015)는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미국 유학과 한국 교육·문화 엘리트들의 삶을 15년간 추적한 역작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대학의 글로벌 해계모니에 지배받는 자들이지만 한국 대학과 사회에서는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놓인다. 대다수의 한국 엘리트들은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격차에서 오는 이점을 활용해 성공하려는 전략을 택한다. 또한 다른 계층이나 집단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사회적 보호막을 친다.

이러한 미국 유학과 엘리트들의 속성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국 지식인들 태도와 많이 닮아있다. 개화기 이래 한국 지식인들은 선진적이고 발전된 서구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 이들은 서양과 동양, 문명과 전통(야만), 인간과 자연,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등으로 대변되는 악명 높은 근대적 이분법을 자



(사진 = 중앙일보 DB)

발적으로 체화했다. 이제 근대적 이분법 너머, 즉 우리가 신봉했던 서구중심주의의 담론의 이면을 진지하게 탐색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대항해 시대, 문명화, 선교 등으로 포장된 서구중심주의 역사의 한 단면을 들추어보자.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 ‘인도양’은 모두에게 열린 공동의 자산이었다. 포르투갈인들은 1498년 이미지의 해양에 들어왔다. 그들은 인도양에 ‘법적 공백’이 존재하며, 자신들이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포르투갈은 인도양에 국가 폭력을 들여왔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인도양을 ‘닫힌 바다’, 즉 일종의 ‘영

해(領海)’로 선언했다. 왕은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

그렇다면 대서양의 경우는 어떠한가? 『노예선-인간의 역사』(2007)는 영국(1807)과 미국(1808)의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책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엘리트들은 이러한 고결한 행위를 축하하고 토론하지 않았다. 노예제도라는 불온한 역사가 현재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노예선’은 “급속히 성장하는 대서양 자본주의의 체제와 노동력의 지지대였다.” ‘노예선’은 전 세계 자본가와 노동자를 연결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연

결을 통해 대서양 자본주의의 주요 순환 체계가 구축됐다. 이러한 폭력적 시스템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서구중심주의 담론을 있게 한 뿐이며,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냉혹한 사슬에 연결돼 있다.

한국은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독립 이후 서구 열강의 개입으로 나라가 분단되었으며,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자들의 메아리가 투영된 서구적 담론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문명’이라는 가면을 쓴 이 ‘야만’의 목소리를 넘어서 야 할 때이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③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행사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대학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며, 대학의 재정을 후원하는 주체들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지도 않았다. 또 국민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학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 이는 노조가 경영 참여를 넘어 경영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립 대학교에서는 총장직선제가 재단의 전횡에 맞선 교수들의 주체적 대응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교수들이 총장직선제나 교수 중심의 총장 선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유럽의 대학들과 한국의 대학들은 역사성이 다르다. 유럽 대학들에서 교수들의 권한이 강한 것은 여전히 중세적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의 대학들은 자치 도시와 같은 자치권들을 행사했다. 유럽의 대학들은 장인들이 모여서 일종의 동업자 조합인 길드를 조직하듯이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학자들의 동업자 조합인 대학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차치 조직에서 출발하는 경우

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학자들과 학생들은 다른 직업의 길드 구성원들과 달리 유럽 각지에서 온 이들이어서 국제적 성격이 강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대학을 해당 지역의 왕이나 영주가 통치하다가는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었다.

교수들을 중심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학과 교수들이 자신의 동료 교수를 선발하는 오래된 특권이다. 대학의 교수 선발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만, 실제적인 결정은 학과 교수들이 하고 종장은 사실상 학과 교수들의 결정을 승인하는 것에 가깝다. 대학에서 교수들 자신이 동료 교수를 선발하는 전통은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다. 새로이 대학교수를 선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기존 길드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셈인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중세적 전통을 떠나서 교수들이

자신의 동료를 선발하는 것은 자신들

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 분야에 어떠한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 잘 안다고 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안다고

있을 수 없는 노조의 채용장사라는 황당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은 한 국경제가 국가주도로 성장했고, 기업의 소유주로 행세하는 대주주가 자기 자본비율이 매우 낮아서 정치적 외풍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주인이 완전한 주인이 아니다 보니 고용된 이들까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용인들의 채용장사와 유사한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대학이다. 교수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인양 포장된다. 교수들은 동료 교수를 선발하는 권한을 움켜쥐고서는 선발과정을 마치 추기경들의 교황선출 과정처럼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추악한 선발과정이 밝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밀에 부치는 것이다.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

참여마당

권오창 (법학 1966)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대학생멘토링 멘토



바람직한 한국대학생의 모습

청년기는 생명력과 힘, 그리고 건강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도전 정신과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따라서 청년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여러 분야의 융복합을 요구하는 만큼, 전공 이외의 학문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합니다.

우선 고전을 중심으로 다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 논설문을 작성해서 언론이나 학술모임 등에 기고하거나 발표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퇴고하는 습관도 기르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또한 상당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공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학문이나 과제에 어려움을 마주할 땐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과업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결단력을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오직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원하는 꿈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만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4시간 정도는 일정표를 작성하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나 원하는 목표를 먼저 이룬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만큼 인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게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슈

약용되는 생리공결 제도, 세부 시행세칙 마련 필요

김혜준 기자 khj_hyejun@knu.ac.kr

생리공결 제도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 생리공결 제도는 생리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학생의 결석을 공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 인정) 1항 5호에 따라 월 1회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해주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교육현장에도 도입됐다. 그리고 우리학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 생리공결 신청방법이 지나치게 간단해 악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결석사유 발생 뒤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해당 교·강사가 직접 Info21에서 출석인정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출석 인정 절차가 완료된다. 타 질병과는 다르게 별도의 서류나 확인과정 없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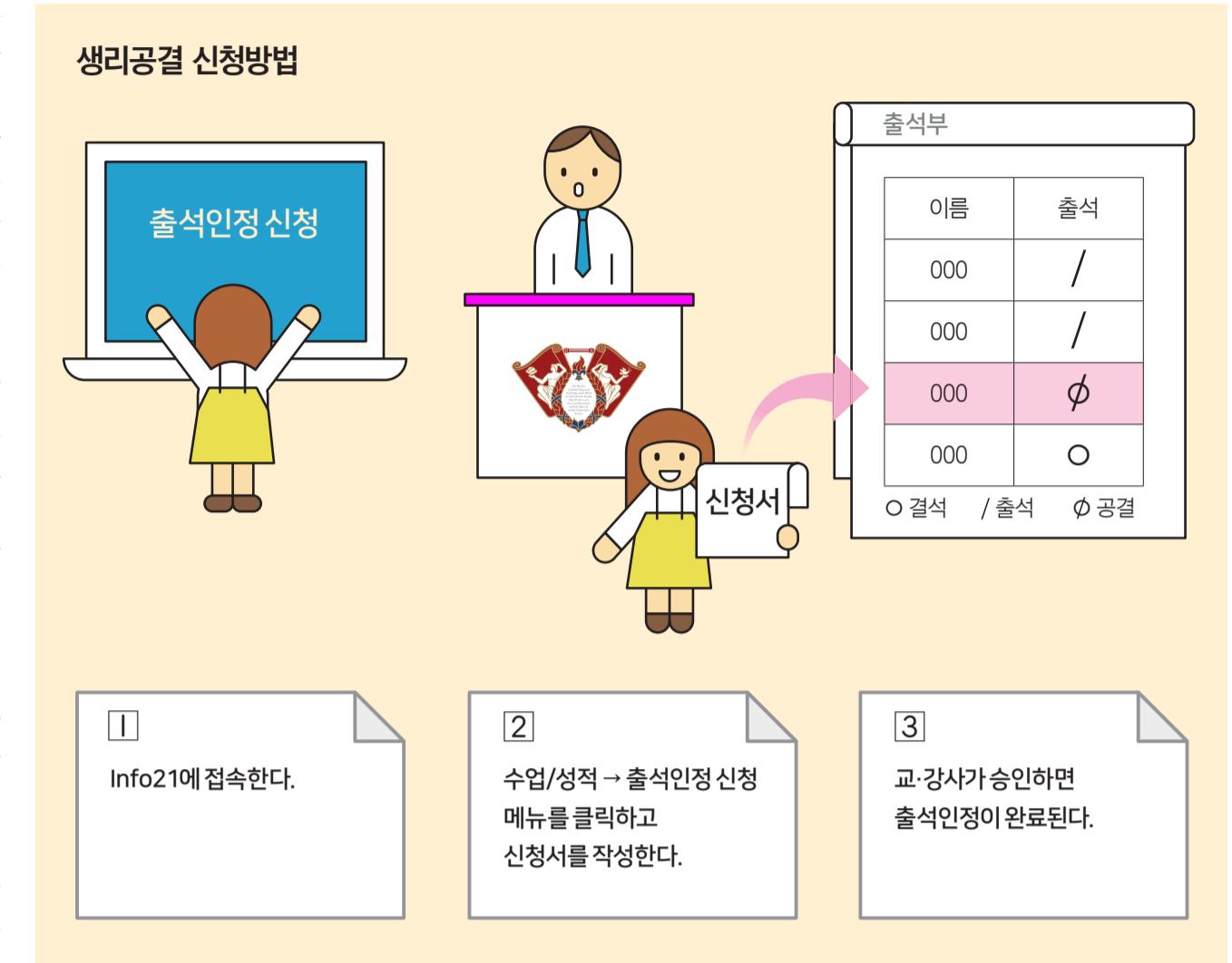
그 결과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제도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발견되는 상황이다. 김민철(체육학 2018) 씨는 “축제기간에 같은 조원 여학생 3명이 동시에 결석하고 다음 수업시간에 생리공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최근에는 남자친구의 군대 외박 날짜에 맞춰 생리공결을 사용했단 글을 SNS에 올린 동기가 있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제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 가지고 있는 것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생리공결 제도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황고은(한국어학 2018) 씨는 “생리통으로 인해 배가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날에는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다”며 “생리공결을 사용한 날에는 하루 종일 누워서 쉬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지윤(유전공학 2018) 씨는 “생리공결 제도는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악용 가능성은 제도적 허점에서 발견된다. 월말에 생리공결을 사용하고 내달 초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도 지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시행세칙을 마련해놓은 대학도 있지만 우리학교는 없는 상태다. 우리학교 생리공결 제도의 세부 시행세칙은 생리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와 결석 일수가 강좌 당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적과 직접 관계되는 시험 등에도 불허한다는 것뿐이다. 이에 반해 연세대는 한 학기 최대 5일, 1회 최대 2일까지 생리결석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사용은 3주 후부터 가능하도록 세칙을 설정했다. 이는 평균 여성의 생리 주기가 약 28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생리로 인한 결석에도 병원장 직인이 날인된 병원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해 소속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단, 관련 서류를 학기 중에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기로 작성된 처방전은 출석 인정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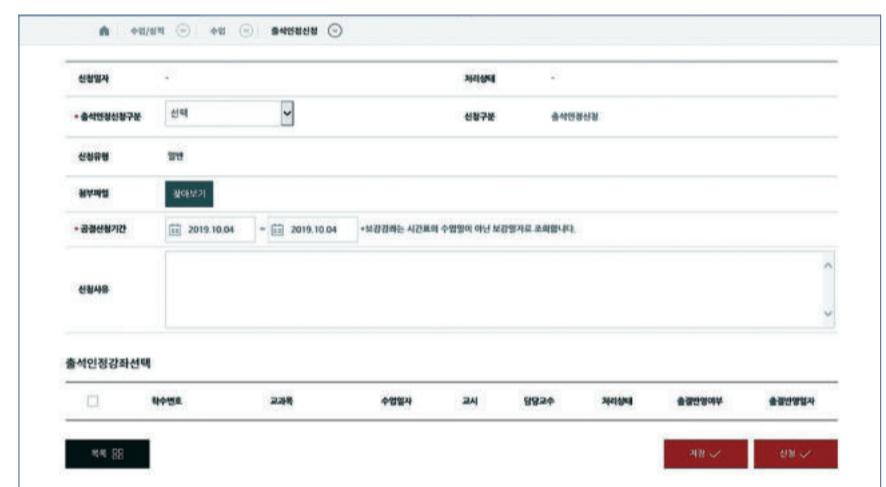
서울권 주요대학 12곳 중 생리공결 제도를 정식 도입한 대학은 8곳이다. 생리공결 제도를 정식 도입하지 않은 대학 4곳 중 한 대학인 서강대는 지난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총 3학기 동안 생리공결 제도를 시범운영했지만 끝내 정식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제도 시행 분석 결과, 생리로 인한 결



석이 일반 결석의 패턴과 차이점이 없어 일반 결석의 대체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식 시행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생리공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서울대는 아직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무처 학사과 측은 “상위 규정상 생리공결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인권위 권고사항으로만 알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하지 않으려 한 것보단 관련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생리공결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대학도 있다. 숙명여대는 이번 학기부터 생리공결 제도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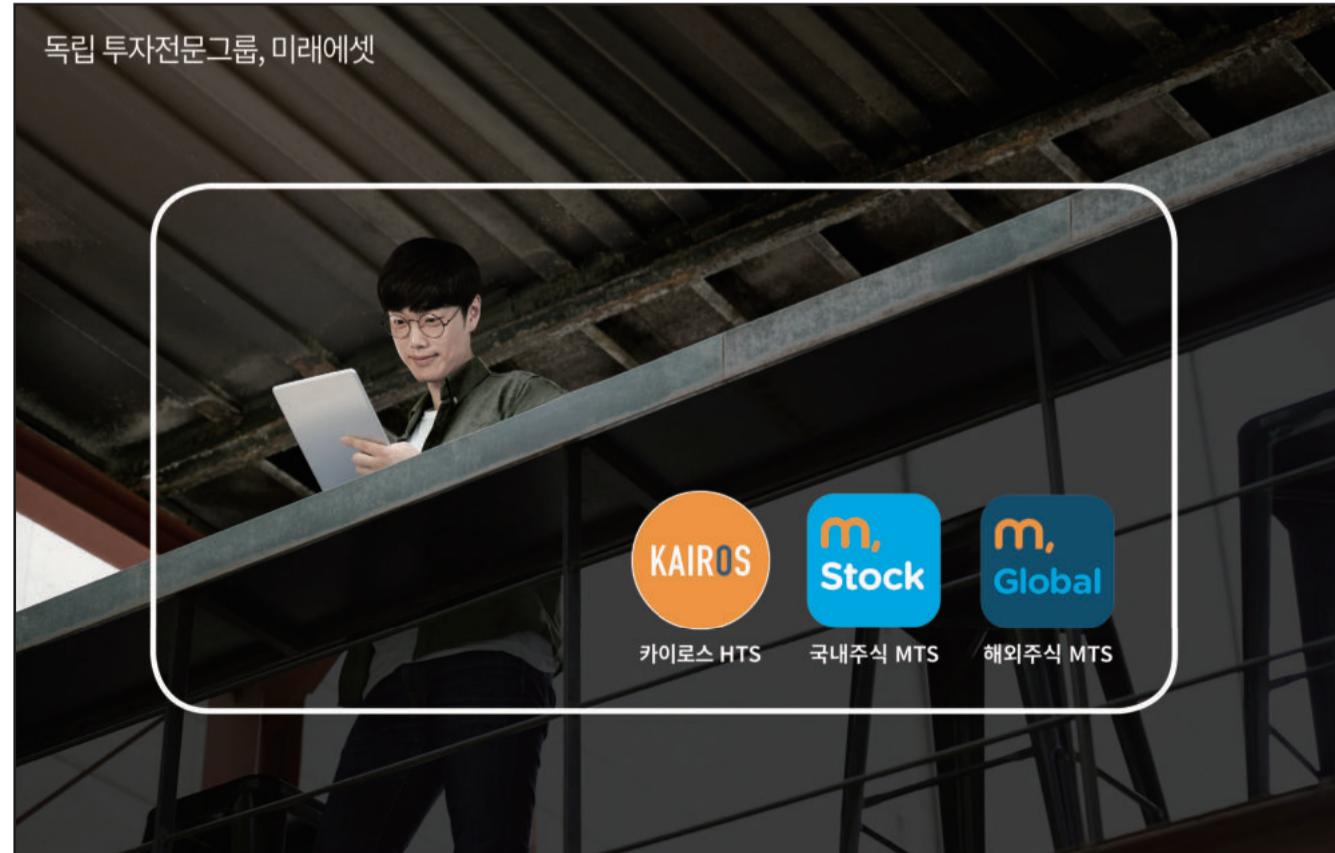


▲ 우리학교 생리공결 신청은 Info21에서 이뤄진다.

시범운영하고 있다. 숙명여대 교무처 학사팀 측은 “시대의 흐름과 학생들의 요구로 생리공결 제도를 도입했다”며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한 학기 동안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문제가 발생할 시 규정 아래 시행세칙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정식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3863호 (2019.09.24 ~ 2020.09.23)

한번 다운로드, 평생 글로벌 투자파트너- 미래에셋대우

좋은 파트너 선택이 평생투자를 좌우합니다.
앞선 파트너와 함께 하세요

-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 글로벌 리서치센터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총 33개국 거래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국가간 환전 없이 당일 사고파는 통합증거금 서비스

*일부 통화한정 / 실시간 결제환율 적용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